



정권의 위기를 기회 삼아 원·하청 단결과 반격을 시작하자

해체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이 기사회생과 역겨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발파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것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김지윤 씨의 '해적기지' 발언을 트집 잡아 반대 운동에 대한 마녀사냥도 시작했다. 진보진영의 기세를 꺾어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한미FTA도 발효했고, 핵발전 확대, KTX 민영화, 위선적인 탈북민 방어 캠페인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진 개악과 반동 시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파의 위기는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동 공세로 우파를 결집시키려 하지만,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당장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생각'으로 옮겨가면서 분열상도 커졌다. 오죽하면 조중동마저 "보수 분열시켜 어쩔 셈인가" 하며 탄탄하겠는가.

더구나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국민은 '올해 총선은 정부 여당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세는 반우파 정서를 더 강화하는 효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위기와 우리 쪽의 기회는 여전하다. 이 기회를 틈타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도 꿈틀대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구속·연행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서고 있고, 민주노총은 3월 31일과 4월 1일 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3월 25일엔 서울광장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핵안보 정상회의 반대, 한미FTA 폐기,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도 열린다.

MBC 파업은 방송3사 공동 파업으로 확대됐고, 지방 MBC와 <연합뉴스> 등까지 가세하며 전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언론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도 KTX 민영화에 반대해 총선 직후 대규모 집회와 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다.

저항의 기회

보수 정치권의 '좌클릭' 바람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이 보여 주듯이, 우파



작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전진 -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열세다. 특히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은 정세가 우리 쪽에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것은 모진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여 온 비정규직 투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류기혁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고, 2010년 25일간의 영웅적인 점거파업이 벌어졌다. 황인화 동지가 분신을 시도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를 당했다. 이런 투쟁이야말로 이번 판결을 낳은 진정한 힘이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 민간서비스, 공공 부문 등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법적 정당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최병승 동지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현대차의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1만1천여 명에 이르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동부 발표로만 33만 명에 이르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직고용돼야 한다.

그래서 경총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불평했고, 현대차 사측은 "정규

직화 문제는 독단으로 결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어 온 기업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차 지부·지회가 개최한 간담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참가했고, 관심도 높고 있다.

물론, 아직 2010년 1차 대법원 판결 때만큼 현대차 공장이 들썩이고 투쟁이 솟구치는 상황은 아니다. 바로 2년 전 점거파업 패배의 기억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생히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몸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당시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규직 활동가 다수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이경훈 집행부가 맘 편하게 뒤통수를 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민주파로 바뀌고, 이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집회와 간담회 등을 벌인 것은 나아진 측면이다. 아산공장위원회는 비정규직지회 임원 후보들의 공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근 거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물론, 뺏속까지 '친재벌·반노동'인 이

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이 대법원 판결만으로, 선거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차 사측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있다. 사측은 최근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며 분열 이데올로기를 퍼붓는 데도 혈안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세지고 고용불안이 생긴다' 하는 논리로 말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정반대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방패막이가 아니며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의 서막이다.

기업주들은 지난 십수년간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정규직의 요구를 통제해 왔다. 언제든지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비정규직의 존재는 사측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무기가 됐다. 지금도 정부와 현대차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성 증가, 임금 삭감'을 읊어대고 있다. 이들은 역겹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들먹이며 "정규직 과보호", "노동 귀족" 운운하고 있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단결

사측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다.

안 그래도 사회적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벌떼같이 달려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라. 더구나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성 강화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사측이 정말 피하고 싶은 악몽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사측의 악몽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투쟁 확산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경총의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자. 현대·기아차 노조 등 금속노조가 나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공동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하자.

금속노조의 3월 17일 영남권 노동자대회, 3월 25일 집중 집회는 파업 등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것은 금속노조의 파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그동안에도 공동 파업을 말해 왔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실망과 회의는 커져 왔다. 대중 투쟁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협상에만 기대온 것이 이런 문제를 낳았음은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점이다. 이 속에서 시기 집중 투쟁도 대개 힘을 받지 못한 채 각개약진식으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온갖 문제에서 횡설수설하며 우파 세력의 기사화생을 돕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민주통합당에 우호적이었던 <한겨레>마저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명숙 지도부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기층의 광범한 분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 항의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건설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 쌍용차 투쟁 등에 더 많은 노조들을 동참시키고 함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야 한다. 상반기 투쟁이 광범한 단결과 열기 속에 힘을 발휘할 때, 6월 입단투와 8월 정치 파업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올해는 싸워 보자’는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비록 9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발의된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위한 총파업’안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것을 보라.

현장 활동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꾀하며 투쟁 건설의 구심이 돼야 한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점거파업 이런 투쟁을 일으킨 투사들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한다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당장 대대적인 정규직 노조 직가입 운동을 벌이자

김우용 기아차지부/ 금속노조 중앙위원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 판결을 순순히 수용할 리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최근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해 ‘비정규직 신규 투입과 계약해지 금지’를 결정하고, 올해 입투와 연계해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지부는 어디에서도 ‘정규직 노조로 직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투사들조차 ‘정규직 조합원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문용문 집행부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밝힌 정규직화 투쟁 계획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즉각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규직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함에도 우리가 그걸 막아온 부끄러운 과거부터 청산하자”(제2민주노조 운동실천단)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다.

형식

보수적 국가기구인 대법원조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한 마당에, 대의원대회 등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미 1사1노조를 정한 금속노조 규약이 현대차지부에도 적용돼야 옳다.

사측이 대법원 판결을 ‘최병승 개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억측을 부리

는 상황에서, 만약 문용문 집행부가 최병승 동지만 조합원으로 추인한다면 ‘사측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와 활동가들 역시 직가입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정규직이라는 판결까지 난 마당에, 정규직 지부 조합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집행부 구성에도 난항을 거듭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지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자는 하나다!’,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하자!’고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정규직 연대가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주도성 때문에 정규직 지부에 가입하길 미적거리는 것은 스스로 주장한 연대와 단결을 부정하는 꼴이다.

물론, 비정규직 투사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정규직지부 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 추진이 가로막혔고, 이경훈 집행부는 파업 파괴 행위까지 했다.

그러나 노조를 따로 둔다고 해도 중국엔 정규직이 투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2010년 점거파업이 이를 분명히 보여 줬지 않은가.

무엇보다 지금은 그동안과 상황이 다르다. 민주파 문용문 집행부가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의 판

결이라는 무기와 함께 사회적 지지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된 노조로 단결한다면, 더 큰 힘과 지지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부 보수적인 정규직 대의원·조합원 들조차 직가입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용문 집행부와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대대적인 직가입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분열

정규직지부와 활동가들이 진정성있게 운동을 건설한다면, 1만여 명의 젊고 활력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신을 갖고 노조에 가입할 것이 분명하다.

정규직 노조로의 직가입은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공작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도 만들 것이다. 또 비정규직 사이의 단결에도 이롭다. 사측은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잘 보이는 놈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켰다. 모두가 한 노조로 뭉쳐 정규직화를 위해 싸운다면, 이 논리도 먹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직가입 운동을 건설하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자. ‘원·하청 연대회의’보다는 하나의 노조로 뭉쳐 투쟁하는 것이 1백 배는 더 효과적이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정규직지부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선전·선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건설해야 한다. 이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좌파다운 태도가 아니다.